

# 與 의총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 추진

### 윤 취임 100일 이전 공식 출범 이준석 법적대응 13일 회견 국민의힘 내분 당분간 이어질 듯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5선 중진의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연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국위원회 직후 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으며, 주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이를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이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 확정된다. 전국위는 ARS 방식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한다.

'주호영 비대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비대위원 인선을 마친 뒤 가급적 이번주 안에 상임전국위원을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이준석계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밝히면서 당 내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완결됨과 동시에 최고위원회의가 공식 해산되고 이 대표의 '자동 해임'되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과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며 전국위 종료 이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오는 13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이 대표는 상임전국위가 비대위 전환을 추진한 지난 5일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직접 법적 대응을 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진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이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이전에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송갑석 “수도권-비수도권 상생해야 필승”

### 민주 최고위원 비수도권 유일 후보 광주시·구의원 79명 지지 성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호남 대표로 최고위원에 도전한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화로운 상생이 있어야만 민주당이 필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호남 정당을 벗어나 전국 정당이 됐는데 수도권 출신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은 민주당의 필승 전략에 역행하는 것이다"면서 이것이 주장했다.

그는 "강한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든든하게 지역에서 버텨주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선 초반, 최하위를 기록 중인 송 의원은 "호남

의 민심이 정확하게 지도부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당원과 호남인의 여망이 있었는데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호남이 2번 연속 최고위원 진입에 실패했는데, 호남이 빠진 지도부의 구성은 민주당으로서 보기에 못보이고 어색하다"며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호남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출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시의원 22명, 구의원 57명은 송 의원 지지 성명을 내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비수도권 후보가 당 지도부에 반드시 입성해야 한다"며 "유일한 대안인 송 후보를 다시 한번 지지하며, 광주 민주당원의 총결집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강진과 광주 합동연설회에 앞서 광주를 다시 찾아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 서삼석 “쌀값 안정·재고미 해소 대통령 입장 밝혀야”

### 국회 농해수위 위원·민주 국회의원 전남지사 등도 쌀 수급 대책 촉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여·여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및 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각각 6월과 7월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서 의원 등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에 대해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 부로 재이관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은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은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대비 21%가 폭락해서 45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장관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법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 있는 자세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당헌개정 충돌...박 “사당화” 이 “나와 무관” 강 “시기 부적절”

### 당 대표 경선 CBS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기호순)가 9일 CBS 토론회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박 후보는 당헌개정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를 향해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친 검찰의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니냐"며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 "이미 당원들의 당헌 개정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비대위에서 추진했다"며 "박 후보 생각처럼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니다.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이 논란이 한참 지났는데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이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여당 됐을 때와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일 때 이 조항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시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으나, 지금 집권당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지금도 아무 관계도 없

는 제 변호인들을 회한한 이유를 붙여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반면 강 후보는 "이 문제가 이 후보를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느냐를 떠나서 당원들로부터 제기된 것이라면 철저히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 후보는 "(개정을) 안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다"면서 "개정한다면 불필요한 기소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둬주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세부적인 대야 투쟁 전략을 두고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관저 공사 수주 의혹 국조요구서 오늘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공사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10일 제출하기로 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내일께 국정조사 요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해 까도 까도 특혜 의혹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사정(소관 상임위원)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8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는 8월 30일쯤 열 예정이며, 결산 심사와 상임위 활동은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